

# 정부 간 항만배후부지 관리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부산항 신항 중심

강운호\* · 김보영\*\*

\*, \*\* 한국해양대학교

## A Study on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Port Hinterland between Governments : Focused on the Busan New Port

Kang Yun-ho\* · Kim Bo-young\*\*

\*,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항만, 항만배후부지, 부산항 신항, 부산항만공사, 기능배분

**Key Words** : Port, Port Hinterland, Busan New Port, Busan Port Authority, Functional Distribution

### 1. 연구목적

부산항 신항은 현재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기능배분이 불명확하고 기관들 간 협의가 어려워 당초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분석시각을 설정한 후, 이에 기초한 질적연구를 수행한다. 분석시각은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료화의 원칙이며, 자료는 항만배후부지 관리기능과 관련된 각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갈등사례 등을 활용한다.

### 3. 현황 및 문제점

부산항 신항은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 하에 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 명시된 BPA의 사업 이외의 사무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걸쳐져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및 명칭에 관한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부산항 신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은 법률상으로 「항만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을 큰 틀으로 「항만공사법」에 따라 BPA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나,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상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항만배후부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경남남도 창원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한 법률관계는 사업범위 불명확 및 업무의 중복 등 행정력 낭비를 가져온다.

현재 부산항 신항 복권배후부지의 개발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당초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개발키로 하였으나, 부산도시공사가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물류지원시설이 들어와야 할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항만물류기능 상실 및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다른 예로 배후단지의 도로는 「항만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나, 부산시의 「부산광역시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르면 민자사업을 제외하고는 부산시에서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부산항 배후부지 도로의 신호기 설치 의무는 부산시와 창원시에 있고, 관리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및 BPA 모두에게 있다. 이 경우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전가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관 간 업무분담이 시급하다.

### 4. 개선방안

따라서 각 기관들의 수행기능을 명확히 하고, 관련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함으로써 책임을 명료화해야하며, 기관들 사이에 관리권을 둘러싼 경쟁이 있는 경우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능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기관 간 협의회 설립 등 거버넌스체제를 적극 구성·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 First Author : yhkang@kmou.ac.kr, 051-410-4732

\*\* Corresponding Author : bykim@kmou.ac.kr